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7차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 학습내용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제한

▶ 학습목표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허용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

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법 제17조 및 표준지침 제7조)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 외에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제공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요건 및 법적 근거 그리고 한계와 위반시 법적 책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1. 내용

1) ‘제3자 제공’의 개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제공은 ‘공유’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전달)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나아가 개인정보가 담긴 DB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및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표준지침 제7조 제1항).

이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란 불특정이 아닌 특정된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과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는 제외한다(표준지침 제7조 제2항).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2) 제3자 제공의 요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법 제17조).

- 첫째, 이러한 제3자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 둘째, 법률의 규정 및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2호),
 - 셋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3호),
 - 넷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5호)
- 그리고 다섯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39조의3 제2항 2호·3호)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공지할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제3자 제공'과 기타 유사개념비교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목적 외 이용(법 제18조)', '처리업무위탁(법 제26조)', '양도·합병 등(법 제27조)'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제3자 제공'과 이와 다른 '목적 외 이용', '처리업무위탁', '양도·합병'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필요하다.

가. '목적 외 이용'과의 구별

이러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권 및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권과 관리권을 기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단순히 개인정보처리자(기관, 단체, 법인 등) 내에서 수집당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다른 스스로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는 구별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의 다른 부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나. '처리업무 위탁'과의 구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유사한 개념으로 '처리업무위탁'이 있다. '처리업무를 위탁'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제3자의 처리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특히 '처리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되지만, '제3자 제공'에서는 제3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추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처리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 제공에 대한 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영업의 양도·합병'과의 구별

영업의 양도·합병의 경우에도, 영업양수자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의 양도·합병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닌 관리주체만 영업양수자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이 이전되는 제3자 제공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영업의 양도·합병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 제17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요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침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에 있어서보다 훨씬 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첫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둘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동의는 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받아 둔 동의로 제한하므로, 기존에 받은 동의의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게 되어, 동법 제18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이러한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및 표준지침 제7조 제3항)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동의시 고지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제3자 제공에 따른 동의서 작성 예시¹⁾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 주식회사	성명, 나이, 전화번호	마케팅 및 홍보	1년 6개월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에 불가피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당해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가장 바람직하나, 이

1)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54면

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에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가. 법률에 제3자 제공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률이 구체적으로 제3자 제공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

- 시·군·구 장의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교부 (「공직선거법」 제46조)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자 교통법규위반 개인정보 제공 (「보험업법」 제176조)

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법령상의 의무는 법률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도 포함된다.

■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시²⁾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의 강사명단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감으로의 개인정보의 제공
- 소득지급자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를 이행하기 위한 과세관청으로의 개인정보의 제공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

개인정보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 또는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민원업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인 내지 피민원기관에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가피하한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³⁾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예시

-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

4)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2)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55면

3)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55면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집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급박한 생명 등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예시

- 주민센터나 경찰관서가 시급히 수술 등의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교통사고시, 환자 또는 가족의 연락처를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경우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당시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법 제18조 제1항).

6)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3호)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II.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제한 (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표준지침 제8조)

법률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시행령	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표준지침	제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1.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의 원칙적 제한(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및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등에 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주체 등으로부터 받은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동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 자체의 프라이버시가 강력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또한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더욱이 요즘은 맞춤형 광고서비스가 활발한 시대이므로, 개인정보를 각종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많다. 일반적으로는 회원가입시 대표적으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에 대한 Q&A, 애프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동의시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예시⁴⁾

-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계정 주소로 사전 동의절차 없이 교육 등 마케팅 홍보자료를 발송한 경우
- 조세 담당 공무원이 자신과 채권·채무 관계로 소송 중인 사람에 관한 납세정보를 조회하여 소송에 이용한 경우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의 별도 상품·서비스의 홍보에 이용
-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A/S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광고에 이용
-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공개 취지 등에 비추어 그 공개된 목적을 넘어 DB마케팅을 위하여 수집한 후 이용하는 행위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의 예시⁵⁾

- 주민센터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이 복지카드 신청자의 개인정보(홍보 마케팅 등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설학습지 회사에 제공
- 홈쇼핑 회사가 주문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열 콘도미니엄사에 제공하여 콘도미니엄 판매용 홍보자료 발송에 활용

2.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오늘날, 하지만 정보산업의 발달 및 개인정보를 통한 활용은 단순히 비즈니스를 넘어 원활한 일상생활 및 생명, 재산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4.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이거나,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57면

5)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58면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시의 목적 외라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이때 제2호에서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로 한정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령상 의무 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목적 외 이용·제공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⁷⁾

다만,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될 수 있음(보호위원회 결정 제 2018-14-133호 참고)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규정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예시⁸⁾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공 요구
- 병역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국회법 제128조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각 목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8조 제2항). 나아가 목적 외 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경우(제18조 제2항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는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원래는 제2항 제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20년 2월 4일 개정으로 이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가 신설되었다.

7)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58면

8)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59면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제3항)

[Q] 공공기관 근무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⁹⁾ (표준 해석례 34)

공공기관의 조직도에 공개되는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소속, 이름, 내선번호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정보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위원회 위원, 통리장 등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Q]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¹⁰⁾ (표준 해석례 70)

▶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소장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를 사적으로 제공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나 휴대전화 번호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3자에게 알려주면 법 제1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공동주택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직원, 수탁자,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가 업무로 알게 된 관리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권한 없는 제3자에 제공한 경우 제59조 제2호 위반에 해당.

3.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동의방법 (법 제18조 제3항)

1) 당초 동의와 구분되는 별도의 동의 요함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이때 이러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당초 수집에서의 동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동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9)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63면

10) (사례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66면

2) 동의 획득시 고지사항

당초의 목적과 다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는 각각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동의시 고지사항과 ‘목적 외 제공’에 대한 동의시의 고지사항이 구별된다.

■ 목적 외 ‘이용’의 동의시 고지사항

- 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나.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라.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의 내용

■ 목적 외 ‘제공’의 동의시 고지사항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마.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의 내용

4.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공개(법 제18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첫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둘째, 정보주체(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의사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넷째, 조약 및 그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섯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여섯째,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예외적으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공공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등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런데 이러한 수집 목적 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임을 공공기관의 특성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8월 11일에

제정 및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공한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법적 근거, 목적 그리고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8.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2020.8.11. 제정]
<p>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5. 목적 외 ‘제공’시의 보호조치 (법 제18조 제5항)

1)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당시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표준지침 제8조 제1항).

2) 벌칙

이에 대한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1조 제2호)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제39조의15 제1항 제1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75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	법적 효과	근거규정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법 제39조의15 제1항 제1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제18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호

6.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법 제20조)

인터넷이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면서 개인정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터넷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규에 근거한 제한된 범위에 한정하여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주체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이 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1. 개인정보수집의 출처,
2.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3.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적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자신의 개인정보가 특정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되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란 쉽지 않아 동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공공기관 또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인이 이러한 공공기관의 관보,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전히 동 규정은 상징적인 요구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표준지침 제9조 제1항).

2)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제3자 제공을 통하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위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3. 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제20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 즉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경우가 이러한 고지의무자가 된다.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방법·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는 1.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개인정보처리의 목적, 3.개인정보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제20조 제1항 각 호)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본문). 그리고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단서).

3) 고지 거부 (법 제20조 제4항 단서)

한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서 살펴본 고지사항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둘째,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지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표준지침 제9조 제2항).